

■ 정부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 살펴보니

장애수당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정부가 4일 '신진국 구원을 위한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현 정부 들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애인 복지를 등한시 해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9개 정부 부처가 참여해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단기간에 마련된 것이어서 적잖은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장애아동을 위한 부양수당도 그 대상과 폭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대신 장애인의 이동권 지원을 위해 그동안 시행돼 왔던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연료 지원제는 단계적인 축소·폐지를 거쳐 2010년부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4~6급에 해당하는 경증 장애인의 경우 내년부터 LPG 지원이 전면 폐지되고, 1~3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2009년까지만 현행대로 최대 월 250L(60만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11월부터는 경증·중증 장애인 할 것 없이 LPG 지원 대상에 신규 진입할 수 없게 된다.

뒤 장애인 대책 마련을 지시한 이후 4개월여 만에 나온 것이어서 그만큼 허점도 노출되고 있다. 4년간 투입될 1조5천억원의 예산에 비하면 획기적이라 할 정도로 많다. 올해 장애인 관련 예산은 5천218억원이다. 이 가운데 LPG 지원에만 2천715억원이 배정돼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세우면서 장애인 예산의 절반이 넘는 LPG 예산을 전면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 등에 대해 집중 설득을 벌여 상당부분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장애인의 경우 정부의 이

4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장애인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한명숙 총리 인사말을 자원봉사자가 수화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기본적 삶 보장·사회참여 확대=정부는 3개 영역 13개 세부 과제로 짜여진 이번 대책을 통해 장애수당 확대, 고등학교까지의 전과정 의무교육 실시, 장애인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 중증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내놔다. 정부 관계자는 "현정부에서 가장 시행할 수 있는 긴급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대책을 위해 책정된 예산 1조5천억원도 2010년까지 사용토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수당 확대가 큰 골간 중 하나이다. 내년부터 장애수당 지급 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하고 지급 금액도 2배 가량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급 대상은 현 29만9천명으로 51만

장애인 차량 LPG 연료 지원제 단계적 폐지 이동수당제·고용 활성화 등 방치 줄속 우려

2010년부터 장애인에 대해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에서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이른바 교육권 보장이다. 이를 위해 2009년까지 민간자본(BTL) 유치 등을 통해 특수학교 14개교(2007년 3개교, 2008년 5개교, 2009년 6개교)가 신설되고, 특수학교 950개교가 증설된다. 내년에 장애유아 2천명에 게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특수교육보조원 4천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놓여진 장애인 1천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조를 지원하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들홈) 설치, 중증 장애인 고용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뺨질식 처방 우려=이번 대책은 급속히 마련됐다. 노 대통령이 지난 4월 정신회 장애인 소제로 한 영화 '맹발의 기쁨'을 관람하고 난

같은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실제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장애인 단체 등에서는 이와 관련,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수당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LPG 지원이 폐지되는 만큼 매년 1천억원 규모의 이동수당제 도입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대책의 핵심 과제는 장애인들에 대한 소득 보장이다. 소득 보장을 위해서 장애인 고용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나 이번 대책에서는 이 부분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다. 일각에서는 장애 유형별로 각각의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한 데도 장애 등급에 따른 시혜 형식의 일괄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아베, 헌법초안 前文에 집단 자위권 명시"

마이니치 보도...9조도 '전투력 보유'로 수정

일본 차기 총리가 확실시되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취임 후 자민당의 신헌법 초안을 수정, 전문에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명시한 제2차 초안을 만들 방침이라고 마이니치(毎日) 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적극적인 개헌론자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는 "1차 초안은 충분하지 않다. 집단적 자위권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다. (아베씨가) 찬하를 얻게 되면 제2차 초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작년 10월 창당 50주년을 맞아 신헌법기초위원회를 발족, 새 헌법 초안을 만들었다. 당시 나카소네 전 총리는 신헌법기초위 전문소위원회 위원장을, 아베 장관은 위원장

대리를 맡아 전문 작성작업을 진두지휘했다. 1차 초안은 초점인 제9조와 관련, 전투력 보유를 금지한 2항을 고쳐 '자위권'의 보유를 명기,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조문 해석으로 사실상 허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용어 자체는 포함되지 않아 당내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됐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장관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시한 뒤 전문을 일본의 전통, 문화, 역사를 강조하는 문장으로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아베 장관은 지난 1일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선언시 개헌에 대해 21세

기 일본에 맞는 새 헌법의 제정에 주력할 방침을 밝히면서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임중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하겠다"며 당분간 개헌 절차를 정하는 국민투표법 제정에 전력을 경주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베 장관은 특히 논란이 예상되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해석을 변경해 부분적으로 용인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일본 정부·여당은 오는 20일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선거가 끝난 뒤 새 총리를 선출하는 임시국회를 이틀 후인 22일 소집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제1야당인 민주당이 강력한 반발로 27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연합뉴스

美 "한미정상회담 뒤 대북 경제제재" 유엔 안보리 결의안 실행 의지 표명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가 이달 하순쯤 대북 경제제재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부시 행정부의 이번 경제제재 조치는 그러나 북한의 단·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파문 이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이행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라고 복수의 워싱턴 고위 외교소식통들이 밝혔다. 특히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3일부터 한국을

비롯,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3개국을 방문, 북한의 미사일 및 핵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결과도 이번 발표에 반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교소식통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 정부가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하려던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 14일 정상회담이 끝난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면서 "아직 구체적인 시기가 결정된 것은 아니나 이달 아태 담당 차관보가 3일부터 한국을

고 말했다. 다른 고위 외교소식통은 다만 "미 정부의 발표 내용은 그간 미국 재무부 중심으로 진행해온 해외금융거래 추적법에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발표는 철저히 유엔 결의안 이행과 관련된 것일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미국 재무부가 현재 진행중인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개설된 북한계좌와 50여개에 대한 자금 흐름 추적은 당장 끝날 사안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따라서 현단계에선 언제 끝날 것이라고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선거 귀재' 칼 로브 이젠 찬밥

부시 인기 하락...공화당 기피인물로



미국 공화당 행정부의 최고 자라카로 꼽혀온 칼 로브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선거전략 조언은 대형 선거를 앞둔 공화당 인사들에게 한때 북돋움처럼 여겨졌지만 이제 더이상 찾기 어려워졌다고 뉴욕 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 신문은 특히 로브가 부시 대통령의 최대 조언자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지만 부시 대통령의 인기가 하락하면서 로브에 대한 의구심도 커져가고 있으며 일부 출마자들은 조언을 듣기는 커녕 도리어 거리를 두려 한다고 전했다. 타임스는 또 "이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들이 로브의 선거전략에 의존하지 않는 이른바 '나홀로 선거전략'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으며, 미국 최고의 선거자라카라는 화려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로브의 조언을 폄하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공화당 후보들은 로브 부비서실장과 공공 행사에 얼굴을 같이하는 것조차 기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워싱턴=연합뉴스

濠 도시, 침 뱉으면 '즉석 벌금' 81만원

호주 시드니 근교에 있는 한 도시는 거리에서 침 뱉는 사람들에 즉석에서 최고 1100 호주 달러(한화 약 81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호주 신문들이 4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페어필드 시당국은 '더러운 습관'을 도시에서 완전히 추방해버리기 위한 조치로 거리에서 침 뱉는 행위에 대해 벌금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주에서는 지난 세기 초에 결핵을 뿌리 뽑기 위해 침 뱉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킨 바 있다. /오클랜드=연합뉴스

"美 정부내 작통권 이양시기 합의 안돼"

訪美 마친 황진하 의원 밝혀

미국 행정부내에서도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 통제권 이양 시기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정부는 또 오는 1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전시 작통권 환

수 문제에 대해 먼저 언급할 계획은 없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예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특사 자격으로 지난달 29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황진하 국제위원장은 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시 작통권 이양 시기에 대해 미국 정부부처간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밤미기간에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

민간 싱크탱크 등을 방문했으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데니스 윌더 아시아담당 국장대행,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존 킬리리 전 한미연합사령관 등을 만나 미국측 동향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 국방부가) 조기 이양을 결정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반복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미국측 인사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며 "그들은 한국정부에 대한 섹시함이 있었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조기이양을 이야기하니까 결국 한국 정부가 자초한 셈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진민기자 mar21@kwangju.co.kr



농기계는 구입처를 잘 선택하시어 후회 없습니다.

한아상공

0162-433-3400

- 수확기
- 포수기
- 농기계
- 수확기
- 수확기
- 수확기



가정의 건강을 위한 세심함 속에는 신우 환기유니트 Airpass 있습니다.

신우 환기유니트 Airpass

신우 환기유니트 Airpass